

조봉암과 진보당은 평화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즉 남북한 대표로 구성되는 전 한국위원회와 인도·스위스·체코 대표로 구성되는 국제 감시위원회의 감시 아래 남북한이 동등한 지위에서 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승만 정권이 북진멸공통일을 강력히 주창했음에도 조봉암이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것은 대중이 평화적인 통일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전쟁을 겪은 뒤에 집권세력은 증오심을 고조시키는 데 치중했지만, 전쟁의 상처를 온몸으로 체험한 대중은 평화적인 통일이 남북이 취해야 할 정도임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4·19, 민주주의 혁명인가?

정창현

끝나지 않은 4·19 성격 논쟁

1960년의 4·19는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해 일어난 민중의 민주항쟁이었고, 6·25전쟁 후 본격적인 민주화운동의 첫 출발점이었다. 또한 4·19는 식민지 민족해방운동과 해방 직후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4·19는 이승만 정권의 몰락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왔으나, 주도세력의 미형성과 이념부재로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완성에는 실패하였다. 특히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1961년 5·16군사쿠데타는 4·19의 완성을 좌절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19의 '미완'은 이후 한국 현대사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묻어둔 채 군사독재체제를 경험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독재정권은 붕괴시켰지만 '미완'이었다는 점에

정창현 _ (사)현대사연구소 소장/국민대 겸임교수, khistory@dreamwiz.com

서 4·19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 '미완의 완성'을 위해 4·19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한일협정반대투쟁, '1980년의 봄'과 같은 한국 사회의 격동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까지 4·19에 대한 글들은 본격적인 연구라기 보다는 개인적 경험의 기록이나 평론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홍석률·정창현, 2000, 「4월민중항쟁연구의 쟁점과 과제」 『4·19와 남북관계』, 민연) 특히 4·19에 대한 인식은 연구자의 입장이 깊이 개입되어 세대별로, 한국의 정치·사회현실을 보는 관점별로, 사회변혁의 전망에 대한 입장별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정치적 격동기에 4·19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4·19의 성격 규정은 1960년 4·19가 발발한 직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당시에도 '4월 혁명', '4월 의거', '3·4월 민중항쟁', '민중봉기', '학생혁명', '민족혁명'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명칭뿐 아니라 성격 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서로의 시각을 주장할 뿐 4·19의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나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것이 반세기가 가까워 오는 지금까지도 '4·19는 민주주의 혁명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다만 1960년 2월 28일 대구 고등학생들의 시위로 시작되어 4월 26일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는 시점까지 만을 4·19로 설정하는 데서 벗어나 4·19를 이승만 퇴진 이후 5·16쿠데타 직전까지의 시기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4·19가 시작되어 5·16군사쿠데타로 최종 좌절되는 전체 기간은 이전의 1950년대와도 상황이 현격하게 다르고, 이후 군사정권 하의 상황과도 다르다. 이 시기는 역사의 전후 맥락을 볼 때 독특한 하나의 국면 내지 시기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4·19는 단순히 이승만 정권에 대한 저항만이 아니라 분단과 전쟁을 통해 고착된 분단체제와 남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불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승만 정권 퇴진 이후 본격화되는 통일운동·사회운동도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4·19의 전개과정

4·19를 4·19 발발시점부터 5·16군사쿠데타까지의 전 시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면, 그 전개과정은 이승만 정권의 붕괴, 7·27총선을 획선으로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주도 및 참여세력에 따라 반독재투쟁 시기(2.28~4.26), 운동 대중화와 조직 확산 시기(4.26~7.29),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 촉진 시기(7.29~5.16)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운동의 수준에 따라 2·28시위부터 4·26이승만 퇴진에 이르는 반독재민주화운동 수준의 전기와 4·26이승만 퇴진부터 7·29총선에서의 혁명주도세력의 패배로 이어지는 중기 그리고 7·29총선부터 5·16쿠데타로 미완의 혁명으로 종결되는 후기로 구분하기도 한다. 단계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다르지만 단계를 나누는 계기는 대체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김경대, 1990, 「4월혁명의 전개 과정」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한길사)

첫째 시기는 4·19의 시작부터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기까지의 기간이다. 4·19의 시작은 해방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메카'로 자처하고 있었던 대구의 고교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학원의 정치 도구화'에 반대하여 일어난 대구 고교생의 시위 이후 전국에 걸쳐 고교생을 중심으로 한 시위가 이어졌다. 3월 15일 3·15부정선거에 항거하는 민중봉기

가 마산에서 일어난(제1차 마산 봉기) 후 이승만 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반대는 언론계, 법조계, 학계로 확대되었고 학생들의 동조 시위가 각지로 확산되었다. 4월 11일 '김주열 열사'의 죽음을 도화선으로 하여 "살인정권을 죽여라"라는 구호 아래 '제2차 마산 봉기'가 일어났다. 제2차 마산 봉기를 계기로 시위는 단순한 부정선거 규탄이 아닌 부도덕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환되었다.

4월 19일 서울대를 비롯한 10여 개 대학생들은 18일에 있었던 고려대생 폭력배 습격 사건을 계기로 총궐기하였다. 학생 및 시민들은 "3·15부정선거 다시 하라", "기성층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중앙청으로 행진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은 학생들을 향하여 발포하기 시작하였고, 이승만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미국은 3·15부정선거 직후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을 지지하였으나, 제1차 마산 봉기 때 경찰의 발포가 있자 곧바로 서울권의 지휘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제2차 마산 봉기와 4·19봉기를 계기로 한국 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19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주한미대사관은 "시위자들이 데모로써 표현한 정당화될 수 있는 불만이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승만 정권을 비난하였다. 이어 매카나기 대사는 경무대에 들어가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향방에 대해 논의하였다. 21일 매카나기는 다시 이승만을 방문하여 한국 정세와 '4·19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각서를 전달하고, 4·19 당일에 미대사관이 발표한 성명과 미국에서 교환된 러스크 국무장관의 각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표 1〉 4·19 시기 희생자의 직업 분포

직업	희생자 수	%
초등학생, 중학생	19	10.4
고등학생	36	19.3
대학생	22	11.8
회사원 및 학원	10	5.4
하층노동자	61	32.8
무직자	33	17.7
미상	5	2.7
계	186	100.0

이승만은 민중과 미국의 지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전 국무위원 총 사퇴, 이기붕 부통령 당선 사퇴, 자유당 총재직 사퇴 등으로 위기를 넘기려 하였으나, 미국의 고무를 받은 25일의 교수단 시위를 계기로 계엄 하에서 민중의 투쟁이 다시 활성화되자, 26일 하야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 학생을 비롯한 대중의 시위 과정은 비교적 소상하게 알려져 있다. 초기 연구자들은 이러한 저항을 학생들이 주도하였고, 비폭력적이고, 비조직적이며, 자연발생적인 시위였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기존의 자료나 연구를 볼 때 이러한 틀을 완전히 뒤집는 반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나 4·19를 단순히 학생들의 정의로운 행동으로 국한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운동에 참여한 것은 학생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시기 시위는 '공명선거추진전국학생위원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하층 노동자와 무직자들의 희생이 두드러졌던 점이 주목된다.(박찬호, 1991, 「4월민중항쟁과 민족민주운동의 성장」 『한국현대사 2』, 풀빛)

이 시기 운동을 주도했던 학생세력 안에도 학도호국단, 공명선거추진위원회 참여 집단, 흥사단 등 형식적 민주주의를 강하게 제기하는 집단과 신진회, 신조회, 협조회, 부산 '암장' 그룹, 농업사회연구회 등 보다 구체적인 민주변혁을 지향하는 집단이 존재하였다. 초기에는 활동이 구분되지 않은 채 결합된 상태에서 전자는 주로 대중 집회 및 동원과정에서 전면에서 나섰으며, 후자는 주로 선전 및 홍보를 담당하였다.

둘째 시기는 이승만 정권의 퇴진 이후 허정 과도정권 하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7·29총선으로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는 과도기이다. 이 기간은 이승만 퇴진 이후에 도래할 한국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확정짓는 중요한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이승만 퇴진 이후 4·19를 주도했던 학생들은 혁명적 공간에 대한 경험의 부재 그리고 운동의 조직과 이론의 빈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이성으로 돌아와자”는 구호와 함께 학내로 복귀하여 학원민주화에 매달렸다. ‘학원민주화운동’은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나는 학도호국단 해체와 자율적인 학생회의 조직이고, 둘은 어용교수의 퇴진이었으며, 셋은 학원 내 행정체계의 민주화를 향한 요구였다.

학도호국단이 5월 3일 해체되고 학생회가 조직되자, 6월에 들어서 서울대 학생회는 ‘국민계몽운동’, ‘신생활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고 서울대 문리대에서는 ‘농촌으로 가기 운동’의 전개를 결의하였다.

7월 6일 서울대학교에서 국민계몽대가 결성되어 “4월 혁명 정신의 보급, 국민 정치의식과 주권의식의 고양, 경제복지의 추구, 신생활 체제의 수립, 민족문화의 창조”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7,000여 명의 계몽대원들을 전국 각지로 파견하였다. 국민계몽대 결성선언문에서 학생들은 “4월혁명이 아직도 진행 도상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조국과 민족의 복지달성의 근본은 신생활, 신도덕에 있다”며 “그 근본 방책은 4월혁명 정신의 완수와 국민계몽운동에 있음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7월 7일, 신생활운동반도 서울대에서 결대식을 갖고

“혁명완수의 2단계로서 경제혁명의 수립”을 외치며 신생활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자, 억눌렸던 민중운동이 이 시기에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민주화와 대중투쟁의 발전을 지향했다. 자유당 정권 하에서 어용화되었던 ‘대한노총’은 1960년 4월 23일 “노동운동의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민주노조가 계속 결성되자 그 기능을 상실하였고 ‘전국노협’이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교원, 은행원, 기자 등 지식인들 사이에서 노조 결성을 위한 노력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교원노조는 노동운동을 단순한 경제투쟁의 범위를 넘어 정치적 차원에 이르게 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리고 5월 11일 거창에서 마을 주민들이 6·25전쟁 당시 마을 면장이었던 박영보를 생화장한 사건을 계기로 양민학살 사건들이 속속 폭로되었으며, 5월 말 ‘경북유족회’의 결성 추진을 필두로 영남 각 지방에서 피학살자유족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학생과 민중운동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공백을 메운 것은 허정 과도정부였다. 과도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혼란한 시기를 잘 수습한 정권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4·19가 진정한 혁명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혁명을 유산시킨 정권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이러한 평가는 허정 과도정부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4·19의 한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4·19의 주체들은 정권을 타도하는 데 성공했지만 비조직적이고, 자연 발생적인 항쟁이라는 한계 때문에 직접 권력을 장악할 역량은 없었다. 또한 이승만 정권의 퇴진도 전적으로 4·19 주체들의 운동 결과라기보다는 미국의 개입과 보수 집권세력 내부의 갈등이 크게 작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권력을 대체할 실질적인 힘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이승만 정권 이후의 권력 재편 문제는 결국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에 없었다.

보수 정치세력들은 기존 국회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을 한 후에 새로 총선을 실시하여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과도정부 하에서 국회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등 몇 가지 민주적 입법조치를 행하고, 6월 15일에 마침내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확정·통과시켰다. 이승만이 퇴진하기 직전 새로 임명한 외무부장관 허정이 과도정부의 수반이 되고,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국회가 4·19의 수습을 담당하였던 만큼 이러한 재편이 갖는 의미는 명백한 것이었다. 4·19의 성공은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구체제의 골자가 유지된 상황 속에서 다소간의 민주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지배집단 내부의 재편을 이루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기생했던 반민주 행위자와 부정축재자에 대한 척결도 지체되었다. 여기에 맞서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권력을 수립하는 총선거가 1960년 7월 29일 시작되었다. 7·29총선에 대해서 초기 연구들은 대체로 공정한 선거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압승과 혁신계의 패배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7·29총선은 3·15부정선거와 같은 노골적인 불법행위는 자행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민주당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소문도 광범위하게 돌았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미국 외교문서에는 이 무렵 미국 정부가 ‘온건 지향적 다수파’인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했음이 드러나 있다.

〈표 2〉 4·19 시기 학생운동의 변화

시 점	주 요 내 용	운 동 성 격	주 도 세 력
4.26~61년 초	학도호국단 해체, 지치학생회 건립, 어용교수 축출, 부패재단 정화 등	학원민주화운동	4·19의거학생대책위, (지치)학생회 등
4.26~7.29 이후(일부 61년 초까지)	농촌계몽운동, 신생활운동 등	국민계몽운동	학생회, 공명선거운동집단, 각 학회, 진보적 서클 출신 일부, 4H클럽 등
60.7~61.5	한미경협 반대, 2대 악법 반대, 남북학생회담 등	민족통일운동	민통련, 진보적 서클

또한 선거 결과를 무조건 민주당의 압승이라 파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7·29총선에서 형성된 대립 축은 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주당 내부의 신·구파였다. 따라서 구파와 신파가 비슷하게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결국 누구도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의석을 얻는 데 실패했다. 즉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거대 여당이 되었지만 어느 정파도 안정되고 지도력 있는 정부를 구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주목할 대목은 7·29총선을 거치면서 초기 4·19를 이끌었던 학생운동 세력이 주도권을 잃고, 통일운동을 전면에 내건 새로운 학생운동 주체가 형성돼 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셋째 시기는 민주당정권이 성립되어 지배체제의 재편이 완료되고, 그와 동시에 기층 민중운동과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다가 5·16군사쿠데타로 좌절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 7·29총선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청년학생, 혁신세력들은 총선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자,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변혁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7·29총선 이후 학생운동세력은 통일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서울대의 ‘민족통일연맹’을 시작으로 각 대학에 이와 유사한 조직들을 결성하였다. 또한 7·29총선 이후 사회대중당, 사회당, 통일사회당, 혁신당으로 분열된 혁신정당들은 뚜렷한 통일론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선거 참패

의 주요한 요인이었음을 자각하고 내부적으로 단일한 통일론을 정립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특히 1961년 1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가 결성되면서 통일운동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일시에 탄압을 받아 중단되었다.

이렇게 4·19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4·19의 궁극적인 지향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4·19가 제기한 과제의 완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4·19의 의의와 한계와 연결돼 있다.

4·19는 과연 혁명인가?

4·19에 대해서는 이를 어떠한 용어로 규정할 것인가부터 논쟁이 있었다. 4·19 당시에는 주로 ‘4월혁명’이라는 표현을 썼고, 모든 공식문서에도 그렇게 표현되었다. 그러나 5·16 직후 쿠데타 세력들은 이를 ‘군사혁명’으로 규정하면서 4·19를 ‘의거’라는 용어로 격하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4·19가 혁명이나 의거냐 라는 차원의 논쟁이 이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이러한 논쟁이 갖는 학문적·사회적 의미는 거의 없어졌다.

4·19 용어 문제와 관련되어 남은 쟁점은 이를 ‘혁명’으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4월 민주항쟁’, ‘4월 민주항쟁’, ‘4·19운동’ 등 항쟁 또는 운동으로 표현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 4·19에 대한 성격 규정 또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4·19 당시에는 이를 주도했던 학생이든 보수적 인사든 모두 ‘혁명’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러나 똑같이 ‘4월혁

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양자의 입장은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몰락에 고무되고, 이후의 획기적인 사회변화가 있기를 갈망하는 입장에서 ‘혁명’이라 했다. 반면 보수 정치세력은 표면적으로는 ‘혁명’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4·19가 근본적인 정치·사회체제의 변혁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다만 이승만 정권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4·19로 표출된 모든 불만과 사회모순이 극복되었으니 더 이상의 변혁은 불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혁명’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이다.

4·19에 대한 성격 규정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성격 규정은 단순히 4·19의 역사적 평가라는 학술적 차원이 아니라 각각이 대변하고 있는 사회집단이 갖는 역사·사회적 발전의 지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는 근대화론적인 입장에서 4·19를 파악하는 관점이다. 1965년에 나온 『4월혁명』(박수만 편, 사월혁명동지회)이 대표적인 저작이다. 이러한 시각은 1980년대 중반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었고, 아직까지 보수학계에 상당히 남아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4·19를 근대화를 추구하는 시민혁명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근대화의 과제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개발(자본주의화)로 구체화된다. 이것은 프랑스 시민혁명의 개념을 1960년대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시켜 4·19를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일부는 4·19를 시민혁명의 제1단계인 ‘민중 반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5·16은 보다 급진적인 세력이 행한 제2단계 쿠데타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격 규정은 주로 보수적 인사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4·19를 근대 시민혁명 차원에서 보는 견해는 일단 19세기 유럽의 현실과 1960년대 한국 사회를 동일한 잣대 위에서 평가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야기한다. 김동춘은 “4·19혁명을 서유럽의 부르주아 혁명의 틀로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분단체제의 유지·존속을 원하는 강력한 국내 지배세력과 미국의 의도가 엄존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세계자본주의의 강한

규정력을 받고 있는 남한 사회에서 어떻게 자립적인 자본주의 발달과 그것을 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사고를 결여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였다(『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1』, 한길사, 331쪽)

이러한 비판은 한국 사회의 조건이 과연 프랑스 같은 서유럽 국가와 같을 수 있느냐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 조건의 차이도 문제이지만 19세기 반봉건 민주혁명의 내용을 1960년대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느냐는 시간상의 편차도 더욱 문제이다. 특정 사실에 대한 평가는 이것이 역사적이라면 시간이라는 개념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한국 사회, 특히 1960년대 초 한국 사회의 현실은 전제주의적 정치질서와 봉건적 경제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온존해 있다고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남북에 두 국가가 존재하는 분단현실에서 근대 민족국가의 수립은 아직도 미완의 역사적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민족국가의 수립과 근대화를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을 1960년 4·19를 분기점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전체 역사상의 수립이라는 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의 근대화는 조선 후기 이래 진행되고 있었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왜곡되기는 했지만 계속 진척되고 있었다. 또한 전제주의를 타도하고 근대국가를 만드는 작업도 독립운동 과정에서 줄곧 발전해 왔으며, 해방 이후 국가도 만들어졌다. 물론 민족 분단으로 근대국가의 수립이라는 면에서 제한성이 있긴 하지만, 비록 분단국가라 해도 이것을 시민혁명으로 타도될 전제왕권과 동일시하기는 어

렵다. 4·19를 19세기 시민혁명에 그대로 대입해서 파악하는 방식으로는 사실상 역사적 맥락을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렵다. 비록 한국 사회가 근대화라는 차원의 과제를 아직도 갖고 있다고 상정하더라도 1960년대 한국의 현실과 역사적 과제를 19세기 유럽식 근대화라는 차원에서 규정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둘째, 4·19를 민족주의적 내지 제3세계론적 시각에서 ‘미완의 혁명’으로 규정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인식은 4·19 당시 진보적 지식인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김세균의 「4·19정신」(『형성』, 1968년 봄호), 유영표의 「4월혁명과 민족국가의 형성」(『형성』, 1970년 봄호) 등과 같은 글에서도 엿볼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시각에서 쓴 글을 모은 것이 1983년 한길사에서 나온 『4월혁명론』이다.

근대화론적 시각이 4·19의 의미를 자유민주주의 내지 경제개발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시각은 4·19 직후 벌어진 통일운동, 한미경제협정 반대운동 등 민족주의의 고양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그 의미를 부여한다. 진덕규는 “4·19혁명은 민족주의적 자기 독립을 열망했던 사람들과 국제적인 냉전질서에 귀속되기를 희망했던 인사들과의 갈등”이라고 규정했다.(「4월혁명의 정치적 갈등구조」 『4월혁명론』) 또한 강만길은 분단시대의 한국 민족주의는 민주화와 민족통일이라는 두 개의 과제를 안고 있는데, 4·19가 반독재 민주항쟁에서 민족통일운동으로 나아간 것은 이와 같은 객관적 조건에 조응해서 한국 민족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4월혁명의 민족사적 맥락」 『4월혁명론』) 민족주의적 시각은 이른바 제3세계론, 종속이론 등을 수용하기도 한다. 백낙청은 1950년대 한국 사회는 반공전선의 전초기지로 제1세계(서방 강대국)에 철저히 예속되거나 흡수되어 있었지만, 4·19는 제3세계 민족해방, 민중해방이라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대의에 참여하려는 우리 민중의 의지를 드러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4·19에 대해 한국 사회가 ‘제3세계로 자기 인식’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4·19의 역사적 의

의와 현재성」『4월혁명론』)

민족주의적 시각의 관점은 서구적 틀을 우리 역사에 그대로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한국의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4·19를 분석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4·19는 전후 민족주의 의식의 성장이라는 면에서 볼 때 하나의 전환점을 이룬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민족주의의 성장이라는 것도 4·19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점이다. 식민지 시기 민족해방운동의 전통이 있고, 해방 직후의 신국가수립운동이 존재했으며, 민족통일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1950년대에도 있었다. 안병욱은 민족운동이 4·19를 계기로 전에 비해 고양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해방 직후 또는 1950년대보다 획기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4월민중항쟁』 『한국역사입문-근현대편 2』, 풀빛)

따라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4·19 시기에 대두된 민족주의가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민족운동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리 매김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는 제국주의의 이해를 직접,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이론이나 방법론적 인식태도를 청산하고, 소시민의 계급적 이해를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소박한 민족주의 시각이나 제3세계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변혁운동론' 적 시각이다.

1980년대부터 사회운동이 성장하고, 한국 사회구성체 논쟁 등 여러 변혁운동 논쟁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한 단계 발전하고, 4·19도 이러한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들이 나왔다. 이 시

각은 박현채의 연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과학적 이론에 대한 이해의 심화과정을 거치면서 사회과학 연구자 사이에 일반화된 시각이다. 박현채는 4·19를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족해방의 실현을 위한 미완의 민중혁명이었으며, 민중 자신이 아닌 학생에 의한 대리혁명”이라고 규정하였다. (『4월 민주혁명과 민족사의 방향』 『4월혁명론』)

이 시각은 4·19를 단순히 민주화나 민족주의의 대두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 비판한다. 이들은 더 구체적으로 4·19 시기의 항쟁과 운동이 과연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했고,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론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정립했는지에 관심을 집중한다. 따라서 4·19에 대한 의미 부여도 민주화나 민족주의라는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혁의 과제와 지향을 중심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4·19를 변혁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려는 견해는 실질적으로 시론이나 문제제기에 가깝다. 특히 이러한 시각은 4·19에 대한 새로운 실증적 재조명에 기초하기보다는 1980년대 사회성격 논쟁에서 나타난 특정 입장을 4·19에 대입시켜 설명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넷째는 4·19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서전(緒戰)으로서 '4월 민중항쟁'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학생운동을 정리한 이재오가 처음 제기했다. 그는 “4월 민중항쟁의 성격은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을 거쳐 반외세 민족통일운동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4월 민중항쟁은 민족통일의 중국적인 해결을 위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서전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1985, 「4월혁명의 새로운 인식」 『민주공화국 40년』, 중원) 이러한 4·19 성격 규정은 4·19 당시 청년학생운동의 핵심인사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의식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4·19 1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민족청년동맹 중앙맹부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집권자 및 그 주변세력들과 어용학자 및 몰지각한 일부 학생단체들

은 ‘4·19혁명’ 또는 ‘4월혁명’ 운운으로써 동포대중을 기만하고 있다. 혁명이란 경제, 사회, 정치의 사회 전반적인 변혁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때 변혁된 것이 무엇이며 발전된 것이 무엇인가?(중략) 3, 4월 항쟁에서 뿌려진 붉은 피는 수많은 선열의 민족항쟁의 피를 이어받고 2·8투쟁과 광주학생투쟁의 그 투혼을 이어받은 ‘3·4월 민족항쟁’이었다. 이 민족항쟁은 3, 4월로 그친 것이 아니요, 그 후에도 항진하고 있었으며,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민족통일이 쟁취되어 민족혁명이 완수되는 날까지 줄기찬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4·19 40주년을 맞아 한국역사연구회 4월 민중항쟁 연구반이 펴낸 『4·19와 남북관계』도 4·19를 ‘4월 민중항쟁’으로 규정했다.

셋째, 넷째 시각의 성격 규정은 4·19를 일제 식민지 시기와 해방 직후에 이어진 민족해방·민중해방·민족통일을 위한 항쟁의 연장선 위에서 파악한다. 즉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민족문제·계급문제·분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항쟁이라는 측면에서 4·19에 접근하는 것이다. 또한 1980년대 전개된 한국 사회구성체 논쟁과 관련시켜 4·19를 평가하기도 하고, 이 시기 벌어졌던 노동운동·농민운동의 문제제기와 극복 방법론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4·19를 ‘혁명이라고 할 것인가, 항쟁이라고 할 것인가’라는 용어 사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차이는 4·19 시기 전개된 ‘민주주의혁명’의 수준과 통일운동에 대한

평가에서 다른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혁명’이라는 용어는 엄격히 학문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4·19는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지만 이를 사회체제의 변화라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4월 혁명’이라는 용어는 4·19가 진정한 혁명으로 가는 것을 저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4·19 직후부터 일부 인사들은 4·19를 혁명이라 하는 것에 반대하고, 이를 항쟁으로 규정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혁명은 이러한 항쟁을 더욱 발전시킬 때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다(이종률, 『3·4월의 인식과 그 올바른 기념』 『민족일보』, 1961년 4월 19일자).

현재에도 이와 비슷한 차원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4·19가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4·19 직후 민족통일·반제국주의·반매관 같은 근본적인 사회변혁의 요구가 나타났으므로 ‘미완의 혁명’이라는 차원에서 ‘4월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4·19의 지향성을 중심으로 용어를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엄밀한 기준에서 볼 때 4·19는 진정한 사회체제의 변혁을 가져온 것이 아니며, 이러한 혁명은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될 과제라는 측면에서 항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어떤 지향점보다는 객관적 현실 자체를 근거에 놓고 용어를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용어의 사용은 엄밀한 과학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미완의 혁명’이라는 성격 규정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혁명’보다는 ‘항쟁’이라는 말이 학문적으로는 더욱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혁명적 분위기가 존재하긴 했지만 4·19 자체를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광주민주화운동이나 1987년의 6월 민주화운동을 ‘항쟁’이라고 규정하지만 ‘혁명’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4·19가 민주주의를 지향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경우 ‘민주항

| 특집 | ③

쟁'이란 용어로, 민중이 주체가 됐다는 점을 부각시킬 경우 '민중항쟁'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용어는 무조건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존중해 주기도 한다. 특정 사건이 실질적인 변화를 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지향점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용어 규정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특정한 역사적 사실과 그 맥락을 어떠한 성격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이다.

4·19 시기는 이승만 정권의 몰락 후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발전 전망을 두고, 여러 사회집단들이 논쟁과 갈등을 벌였던 시기이다. 통일논의는 물론이고 경제개발 문제, 민주화, 냉전체제의 극복 방안 등 여러 차원의 논쟁과 갈등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4·19의 용어 규정과 성격은 이러한 논쟁과 갈등을 당시의 주·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5월~~

5·16,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노영기

1961년 5월 16일 새벽을 가르는 총성이 울렸다. 정치군인들이 총칼을 들이대며 4·19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 출범한 장면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로부터 한동안 한국 사회는 군부가 지배했다.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이른바 '혁명공약'을 발표하고 재빠르게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다. 현상적으로 경제개발이 이루어져 결코 넘을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보릿고개'를 넘었다. 국토방위에 전념해야 할 군대가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 적어도 문민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모두 군인 출신이었다. '상명하복'의 군대문화가 병영을 벗어나 민간사회로 옮겨졌고, '군사문화'라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중대한 전환점이 됐던 5·16쿠데타가 가능했던 이유, 누가 주도했으며 어떻게 진행됐고, 한국 현대사에 무엇을 남겼는지 살펴보겠다.

양날의 칼, 한국군의 성장

한국전쟁을 거친 뒤 한국군은 양적 팽창과 조직 재편을

노영기 _ 조선대 강사, noyoungi@daum.net